

# KNSI REPORT

컨퍼런스

제5회 (비공개)코리아포럼 녹취록 요약본

## 진보개혁진영의 성찰과 모색

일시 : 2006년 10월 18일(수) 15:00-18:00

장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참석 : 사회자 박순성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동국대 교수)

발표자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주간)

김연철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토론자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자문위원-이사진 그리고 초청인사

※코리아포럼은 연구자-정책결정자-관련 전문가들이 실사구시적인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모색하고 지적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장입니다.

## •진보개혁진영의 성찰과 모색

### 박순성

코리아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연구원이 진보-개혁진영의 싱크탱크로서 올바른 방향을 취할 수 있기에, 그 숙제를 찾고자 모임을 갖게 되었다. 박상훈 박사의 발제문에서는 정당정치에 기초를 두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이며, 지식인 및 사회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진보개혁진영의 성찰과 모색’ 부분을 먼저 진행하고, 북한 핵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

### 박상훈

오늘날까지 민주화 20년을 경험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루기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종말론적 논리에서 벗어나, 좋은 민주주의를 하는 데는 그 만한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이제는 실감하게 된듯하다. 민주주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오랜 노력과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그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실천들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보며 문제제기를 해 보았다.

그간의 정치가 민주주의나 아니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0년을 통해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던 방향, 그리고 만들어가야 하는 경로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실 이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선택되면 돌이키기 힘들다. 되돌리고자 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상당히 들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바른 경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는 이야기다.

먼저 ‘당장의 상황이 아이디어 몇 가지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 그러므로 ‘구조적이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둘째, ‘그간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된 경로의 잘못에서 비롯되었고,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경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핵심은 ‘정당에 의한 민주주의’ 라는 이야기다.

사실 한국에서 ‘정당’ 이라고 하는 개념의 이해는 인식이 되지 않거나, 오해되거나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당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가? 정당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인식만으로, 혹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 기존세력이 다시 재조직 되는 것 만으로는 곤란하다. 서구의 정당 민주주의가 근대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충격과 비용 등이 발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운명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이다. 그러한 혁신을 위해 지금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에는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에너지의 응집, 제2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외부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비교적 양호하고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정권교체가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민노당 등을 포함해 운동권이 정치 참여 경험이 있는 만큼, 발전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형식, 제도적 차원의 중요한 진전 이면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의 중요한 가치가 다수대중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라 하면, 현재 그 기준에서 한국 민주주의에는 오히려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계층간의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고민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에서 운동을 통해 이끌고자 했던 민중적인 열망의 기초를 생각한다면, 민주파들이 던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나 가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았을 때, 한국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정치경제 상황의 현 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과연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가까지의 질문을 제기할만한 정도의 상황이다. 이것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가 보다 넓은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포괄하며, 가능한 한 평등화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는 ‘전환’ 이 필요하다.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균형체제라 하겠는데, 반드시 ‘보수’ 적이라고 해석되는 것도 아니고, 극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87년의 두 가지 계기라고 해야 할까, 긴장적, 모순적 계기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두 가지라 함은, ‘운동에 의한 민주화’와 ‘보수적 협약에 의한 민주화’다. 이 계기가 결합된 이중의 질서가 바로 87년 체제인 것이다. 과거의 동력은, 균형체제가 만들어내는 힘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 20년을 지나면서 서서히 이러한 이중구조는 통합되었다. 그리고 2004년 총선 이후 이러한 이중구조에서 비롯했던 동력의 정점은 지나왔다. 현재 막연하게 그러한 동력을 기대하기 보다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년간 발전시킨 한국 민주주의 모델은, 정당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거나, 결국 좋은 정당을 기반을 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과는 다른 경로였다. 왜 민주주의가 고전적인 인민 직접통치체제와는 달리 인민이 통치자를 뽑고 다시 그들로부터 지배받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하고, 많은 정치이론가들이 현대 민주주의가 고전보다 제도적으로 우월하다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정당’ 때문이다. 왜 서구가 19세기 말 정당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그 이전 신분의회로부터 시작해서 200-300년의 긴 비용을 치렀는가, 또한 사회주의자들이 정당을 주목했던 이유와, 독일의 경우처럼 대중정당의 조직적 모델이 체계적으로 발전되어야 했던 이유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다.

정치학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여러 태도가 있는데, 소위 혁명을 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것 같다. 미국의 경우, 가장 중요한 계열은 정당민주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핵심은 ‘강한정당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일종의 테제 같은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20년간 한국의 정치개혁은 궤도에서 이탈해 왔고, 게다가 정치개혁의 부패를 이유로 해서, 정치와 민주정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대중적 기반과 사회적 기반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정권이 거듭될수록 심화되었다. 대중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 그 결과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원내정당화’다. 그 원리 자체는 정당민주주의 이전에 신분회의 원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듯 정당이 대중적 기반을 갖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결국 중간계급 이상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대중적 기반이 없는 정치 혹은 파당적 경쟁을 초월해서 누군가가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와는 사실 거리가 멀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 정당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원리다. 19세기말 20세기 초 진보주의 시대라 불리는 시기에 미국 현대 민주주의의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만든 제도다. 진보주의 시대의 핵심은 부패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 부패를 만들어 내는 정당의 대중조직을 없애기 위해 유권자를 등록하게 하고,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가져온 결과는 미국의 투표율이 지금처럼 낮아진 것이다. 미국민주주의는 완전히 달라져서 정당의 대중조직이 영구히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가 가고 있는 경로가 이러한 경로와 가깝고, 이러한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내용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우리 민주주의 모델이 이것을 극복하고 좋은 정당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라틴 아메리카나 미국이 주로 해 왔던 경향을 따라가는 모양새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벗어나서 정당은 민주주의의 실질적 제도기반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있는 정당을 좋게 만들거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핵심은 대중적 기반을 매우 강하게 갖는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과정과 비용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현대 정당을 위기로 보는 관점들도 존재하지만, 이 토론에서는, 독일의 정당모델이 현대처럼 어떻게 자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등을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근래 독일에서도 정당의 쇠퇴와 위기가 이야기되고 있으나, 실제로 가서 살펴보았을 때에는 ‘정당이 모든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독일의 사회민주당 대통령이었던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생가를 방문했었다. 그의 직업이 애초에 말안장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너무나 평범한 보통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가난한 보통사람들에 헌신하다가 그 지도력을 인정받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좋은 정당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또, 그곳에서 독일 유학생을 만나기도 했는데, 놀랍게도 시 내부의 외국인 대표 위원을 겸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시민생활 모든 곳에 정치가 자리 잡고 있어서 운동적 요소와 시민적 요소를 잘 통

합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매일 운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생활 속에 일상화, 제도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해결책이 결국 근대 이후 인간 사회가 발전시킨 가장 적합한 모델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에게 아직까지 좋은 정당의 동력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실의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으로 대면하기 위해, ‘좋은 정당’ 모델을 고민해봐야 한다.

## 토론자 1

많은 부분, 정당정치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것이 현대민주주의 사회,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위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이러한 당위적 대안이 과연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 현실성이 있는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의 발전이 분명 있었다는 것이다. 냉전반 공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서 민주노동당이 제도권 내에 진입하게 된 것에도 큰 의의가 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왔던 것에 비해 너무 성급하게 새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서구의 경우와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독일의 사회민주당처럼 노조를 관리하는 구조이거나, 노조의 비율이 30%이상인 것도 아니다. 우리의 10%가 고작 넘는 노조조직을 등을 보았을 때 어떻게 이러한 내용이 실현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도리어 정당이 서로의 대의가 다른 상황에서 갈등이 조정되거나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력의 독점을 재승인하게 될 위험도 있는데, 이러한 정당정치에 대한 대응이나 대안이 가능한 것일지. 이것이 이론적으로 옳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를 묻고 싶다.

## 박상훈

기본적인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적’이지 않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정당과 민주주의란 개념들이 긍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사용 된지는 100년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정당 초기, 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고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거의 비판 일색이었다. 정당을 수용하게 된 것은 혁명과 혁명에 준하는 변화를 동반하는 과정이었다.

독일에서도, 전후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헌법을 통해 구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상민주주의를 수용하고, 그때서야 정당민주주의가 자리잡게 되었다. 정당민주주의가 헤게모니가 된 지는 60년 정도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당의 개념이 부정적이다. 아직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다. 좀 더 나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경로를 찾아야 가능한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정당민주주의로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민주노동당은 마르크시즘적 정치관이 자각되지 않은 채 받아들여진 것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실제 의회경험에서 오는 섞임으로, 그 정치학이 무엇이라는 불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은 정당민주주의에 적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의식을 바꾸는 데에도 한참이 걸릴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서 우리가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탈산업화과정을 거치고 있고, 19C모델과는 또 다르기에 그와 같은 형태로는 실현이 불가능 할 것이다. 하지만 꼭 영국식 모델이 아니라 운동적 에너지를 정당으로 전환시켰던 라틴 유럽의 대중정당 모델도 있고, 우리 역시 시민동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그것이 정당 적 에너지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대중을 기반으로 하는 좋은 정치모델을 찾아봤으면 한다. 당장은 실현하기 어렵다고 해도, 조금씩 생각을 발전시켜가면 공통의 합의로 진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렇듯 방향을 염두에 두면, 경험을 통해 차츰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좋은 정치가들이 활약해 줘야 할 몫이 아닐까.

## 박순성

민주노동당을 평가한 기준으로 열린우리당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 박상훈

보수정당은 보수정당 나름의 질서와 계보가 있고 대중정당도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정당이론에서 대입할만한 계보

가 없다. 개혁적 운동을 해왔고 그 정서가 살아 있는 한국적 현실맥락에서밖에 이야기 할 수가 없고, 기존 조직모델로는 설명이 힘들다. 정치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힘을 응집시키는 계기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열린우리당은 위기 때마다 지도부를 바꾸고 쇄신하는데도 힘이 가라앉곤 하는데, 이는 정당모델의 불안정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지적을 해 볼 수 있다. 꼭 대중정당의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조직모델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 박순성

열린우리당을 이론의 틀을 벗어난 정당이라는 했는데, 국민정당론으로 설명할 수는 없나?

## 박상훈

독일이나 러시아, 일본도 그렇고 국민정당노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이 개념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은 독일의 기민당 같다. 기민당을 살펴보면, 물론 국민 전부를 대표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내부에는 노동위원회도 있고 기민당과 사민당의 연정을 유지하고 있고, 신자유주의를 견제하는 입장에 있으며, 당 전체 운영도 한동안 당비에 40%정도 의존할만큼 사회적 기반이 있다. 지지의 대상을 넓게 잡고 있는 것이지 조직의 모델은 역시 대중정당 모습, 그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의 하부기반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유럽처럼 지역지부에 강한 대중조직이 있고 노동조합이나 학생위원회 등이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조직 모델로는 국민정당과 관련이 없다 하겠다.

## 토론자 2

문제제기와 비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다면 ‘그 원인의 원인’을 짚어보겠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라는 사실이나 그 밖의 조건들을 살펴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렵겠으나, 일종의 과도기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구조다. 나름의 재생산 체제가 있고 이것이 작동하면서 사회전반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정당 기능을 대행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정당보다 더 큰 정당, 예를 들어 시민운동도 마찬가지고 그 밖의 정당대행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정당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은 위축된 상태이고 그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그 기능을 다른 조직이 대행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다.

정당의 기능 중에는 이해 조정의 영역과 일상성의 영역이 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버렸다. 정당이 잠식할 수 있는 영역에 이미 나름의 조직이 모두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 예로 시민종교를 들 수 있겠는데, 사실 종교영역이 한국처럼 비대화된 곳이 흔치 않다. 막상 교회는 미국에서, 카톨릭은 유럽에서 들어왔는데, 현지에서는 그 기능이 저하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왕성하다. 일상성의 영역부분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결혼식과 장례식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 다시 말해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종교에서 다 처리를 하니, 정당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정당영역은 위축되고 그 기능이 일상생활로 침투하기 어렵게 된다.

다만 지금까지 보스정당에서 대중적인 조직정당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 않나 싶다. 그 과정에서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를 과도기적이라고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적 보스정당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회경제적인 토대, 즉 이해조정 영역에 관해서도 이야기해보겠다. 과거 유착으로 이루어지던 부분이 현재에 와서 투명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니 그런 부분에서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가 투명해지면서 이해관계 대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는 발전적인 상황이 분명한데, 과거에는 부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이해조정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당을 대행하고 있는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바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겠다. 기존 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꺼리는데, ‘킴프’ 형태의 조직을 선호하고, 영향력을 발휘한다. 일시적이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이는 대통령 책임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조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5년마다 선거에서 이기면 들어가고 지면 해체되는 형태로 반복되는, 이것이 의회정당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문제에 대한 원인 지적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데, 개선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원인이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기능하고 있는 정당대행조직과 그로인해 운영되고 있는 기묘한 시스템이다.

### 토론자 3

모든 문제를 정당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역설적으로, 정당의 약한 구조로 인해 한국사회의 역동적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정당시스템이 안착된 사회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그만큼 정치적 변화가능성은 떨어지는 사회가 아닐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체제구조, 미약한 진보의 사회적 기반에서 빠른 속도로 정당구조가 고착화 되었다면 아마 일본과 마찬가지로 보수정당의 반영구집권 쪽으로 갈 수도 있었다고 본다. 오히려 한국사회의 약한 정당구조가 정치적 변화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문제와는 별개이고, 정당이 지금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를 수렴하는 열쇠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시민사회 운동에서, 운동의 순수성에 관한 의식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일종의 신앙고백을 한다는 이야기도 맞지만, 사실 한국 시민사회처럼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경우도 없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만큼 시민사회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개입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이다. 한편에서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하다가도, 한편에서는 부추김 비슷한 종용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또한 그러한 구조를 승인하고 있는 묘한 대중적 분위기로 인해 실제로는 운동과 정치가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 역동성이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부분 정당 외적 동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런 동력이 정당으로 수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당의 주체가 이러한 현상을 수렴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사회운동 쪽에서도 정당으로 수렴해야 할 절박성이나 그것이 ‘발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 자칫하면 그나마 형성된 시민사회의 역량을 소진시켜버릴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조직화된 힘에 비해 시민사회가 과잉영향력을 가질 정도이지만 실상 조직적 기반은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 사회운동이 쉽게 정당으로 수렴된다면 밑으로부터 형성하는 사회운동의 동력자체가 형성되기도 전에 근거자체가 해체될 수 있는 점도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사이 있어왔던 소위 사회운동력의 정치적 차출과정을 보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 구조에서는 미국형 지지자 정당이나 유럽형 진성정당을 선택할 수 없다고 본다. 진성정당을 뒷받침하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시민사회 조직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진성정당 구조를 짜면 오히려 정치꾼들에 의한 폐쇄구조가 나올 것이다.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을 살펴보면, 13% 지지율이 최대이다. 당 구조의 폐쇄성이 작동해서 대중정당으로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지구당 정당조직을 깨고 밑으로부터 풀뿌리를 흡수해야 하는데, 당을 가둔 현재와 같은 구조라면 밑으로부터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한국사회가 전통적 진성정당구조에 맞지 않는데, 당연히 진성정당과 지지자 정당구조가 혼합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다. 그 속에서 정당의 발전전망을 기대하면서, 정치적 역동성이 폐쇄적이지 않게 흡수되는 틀을 가져야 한다. 100% 오픈프라이머리 틀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 50대 50정도라면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토론자 4

최근 독일에 가서 베를린 지구당위원장과 사민당 전 사무총장을 만났다. 사민당의 고민을 들어보니, 통계상으로 당원의 숫자가 줄고 노령화되는 것이 문제라 했다. 그 대안으로 ‘프로젝트 당원’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일종의 ‘피크닉 당원’이라고 하는 형태의, 당과 시민사회의 부분이 일시적이고 필요에 따라 연합하는 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건이 맞을 경우 일정액의 금액을 내고 행사를 같이 진행한다거나 하는 형태이다. 기존과 같이 집회를 소집하고 토론주제를 던지고 논의하는 등의 행사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인터넷 응대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143년이 된 독일 사민당의 문제와 대응의 경우를 보면서, 사민당의 모델을 열린우리당이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똑같이 가져가고자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다.

근래 관심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보겠다. 첫째는 좌우이념에 대한 고민이다. 진보적 실험도 해야 하고, 합리주의적 면

도 고민하면서 한국적 상황의 새 지도를 그려야 하는 것이다. 새천년의 좌표, 진보적 정당으로서의 새로운 좌표를 찾아야 하는 고민이 있다. 둘째로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인데,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에 대한 것, 대학의 대대적 구조조정을 통한 고등교육 개혁, 비전 2030문제 등 다양한 고민을 한다. 또한 세 번째로, 새로운 실천적 정당모델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당원들 사이에서 상반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좌표는 무엇이나, 그 주체는 무엇이나,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나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관해서도 이야기 해 보자면, 열린우리당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대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열어놓고 가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또한, 요즘 들어 근대정당이라고 하는 것, 탈산업 이후 정당 100년을 보고 폐기 혹은 수정을 해야 하는 수준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단순히 선거전술로서의 오픈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이것이 정당의 근본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한국정치가 현재의 정당구조로 계속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한다. 새로운 정치 세력과 주체가 새롭게 진행해 나가야 하지만, 어떻게 가야할지는 고민중이다. 그리고 현재 가장 큰 고민은 한국적 상황에 대한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이다.

## 박상훈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민주주의가 작동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일수도 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강한 분배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회의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 이 문제를 볼 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인 것 같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정치는 그러한 불확정적인 요소에서 기준을 세우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동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현의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하더라도 당장의 현실에는 덜 직접적이지만, 미래를 생각했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 외에, 앞서 말씀하신 상당부분의 현실지적에 동의한다. 개인적으로 노사모 현상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정당적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서독의 경우, 그린(녹색당)이 전형적으로 운동이 정당이 되는 경우인데, 엄밀히 말해 서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이고 결코 전체를 모두 대변하지 않았지만, 이 정당의 5%가 서독정당체제에 좌측으로부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서독정당체제가 가장 신자유주의적 파고가 높았을 때 버텼다.

또한, 독일에 있어 정당의 대중적 기반 퇴화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국가체제에 정당적 기능이 많이 이전되었기 때문이었다. 복지나,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많을수록 관료체제 안에 그러한 역할들이 뿌리내리게 된다. 물론 그러한 독일의 경우에도, 정당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 우리 같은 경우는 정당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이전 단계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정당민주주의 이후 단계의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와는 문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역사는 비약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전 체제가 민주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다. 정당이 체제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 만남의 첫 단추가 대중적기반이라기 보다는 의회라고 하는 제도적 공간과 선거라는 기제에 밀착된 모델로 출발한데서 발생한 문제가 오래 남지 않을까싶다.

만약, 미국적 모델이 불가피하다면 그 모델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긍정적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선거도 치러야하고 당도 결집해야 하고, 보수정당의 집권도 막아야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체제가 굳어졌을 때 갖는 거시적인 결과에 대한 고민을 균형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비관적인 시각이 많은 시점이고, 국제정치적 여건까지 좋지 않은 조건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비약할 수 있을까. 어느 한 쪽이 어떤 결론이나 진리를 독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문제를 원리 원칙적으로 보는 관점과, 현실주의가 서로를 참조하면서 발전을 이루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 토론자 4

DJ체제에서 사회운동세력이 세 차례에 걸쳐 당으로 수혈되었었다. 그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각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던 사례들이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분명 정치적 성장이었을지는 모르나, 정당의 토대가 커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라는 답이 나온다. 서구적 이론에 근거해서는 열린우리당을 실험식으로 분석할 수 있겠으나, 결국 정치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는 또 다를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러한 논쟁을 만들어낸 최초의 실험적 정당일 수 있고, 그에 따른 분명한 성과와 한계가 있다.

## 토론자 3

우려하는 것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다. 호남지역이 이번 대선에서, 예를 들어 보수적인 후보와의 결합을 이룰 경우 호남지역주의의 역사적 정당성은 상실된다고 본다. 나는 노무현 정부의 패착이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등가로 놓고 보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호남이 소외되고, 약한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정치적으로는 개혁, 민주화, 진보와 결합하게 되었고 그러한 호남지역주의가, 영남의 패권적 지역주의와는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가지며 역사적 긍정성으로 작동되었던 것이라고 보는데, 대선이 치러지고 그 결과 호남 자체의 지역주의가 고착되면, 호남의 고립은 영구히 고착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것은 한국적 정치에서 퇴행적 지역주의의 강화다.

## 박순성

이제 핵문제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겠다. 김연철박사께서 말씀해주시겠다.

## 김연철

핵문제의 해법은 결코 쉽지 않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하는 대신 체제보장을 원하고 있기에, 장기간의 협상이 필요하다. 제네바 합의의 경우도 경수로를 짓는 데 까지 20여년이 걸렸다. 9.19 공동성명 역시 9년~13년의 기간을 요한다. 핵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려면, 정치적 신뢰,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관리능력,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최소 10년 지속가능한 구조가 되어야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선택 방향은 국제적 차원에서 협상구도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내 및 남북관계 신뢰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상황악화를 관리하는 것이다. 1998년과 2000년 김대중정부 시기에는 페리프로세스를 통해 국제적 차원의 상황관리가 이루어졌고 남-북-미 삼각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측면에서도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보완해줌으로써 상황관리가 가능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이 부시 행정부 들어와서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현재의 위기는 2001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2002년 장관급회담이 6개월가량 중단된 것 등 제한적 대화가 이루어졌던 점도 그러하다. 노무현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을 채택할 수 있었던 '체계'가 있었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나, 9.19성명까지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관리를 하면서 해법을 마련하는 이중적 과제의 실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위기의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그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본다.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플루토늄의 양을 늘리거나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조치를 협상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부시행정부는 북한을 협상대상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도덕적 접근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즉 협상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북정책조정관이 임명되고 중간선거가 치러진 후가 되면 미국 내 직접협상을 주장하는 세력들로 인해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전쟁이나 평화냐를 논하는 국면까지 갈 수도 있으나, 결국 부시행정부는 협상에 임할 것이고, 94년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당시보다는 위기가 고조될 것이지만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박순성

오늘의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두 분의 발제에 감사드린다. 현안문제를 매우 정확히, 잘 짚어 주셨다.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됨으로 해서, 최소한 ‘어떤 문제를 고민해야겠다.’ 라고 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